

'풀뿌리 의정 강화'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역할 높고 설왕설래

7급 공무원 신분 '정책지원관' 성격·업무범위 논쟁 "현장 답사 동행해야" "개인 보좌관 아냐" 온도차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기초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사무 범위·역할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13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국에 신설하는 '정책지원관'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무송 의원은 의회사무국에 "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신설된 입법정책실 소속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의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면서 "정책지원관의 분장 사무 중에 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도

관련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5분 발언의 경우, 현장 답사를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정책지원관이) 해당 의원과 현장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느냐"도 물었다.

사무국 측은 "법령에서 정책지원관 업무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이 이 업무, 저 업무를 잡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할 수 있다"면서 "현장 활동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개별 의원들의 현장 활동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 소속돼 의원들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보

완·수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발언 자료를 작성, 도움을 주려면 현장에 동행할 필요도 있다. 현장 활동은 1~2번씩 정도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면서 "10월로 예정된 규정 질문에 앞서 의장단과 협의해 채용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의원들의 정책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무국 측은 "법과 제도적으로는 기초의원들에게는 국회나 일부 광역의회처럼 (개인) 보좌관 제도가 부여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가 과도기적 성격의 제도를 만든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보좌관이 아닌 직업 공무원이다"며 "개별 의원의 의정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세세하게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roles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성격과 업무 범위, 역할을 놓고 각 의회에서는 이견이 오가고 있다.

'발언 원고 작성 등 개별 의원의 구체적인 업무까지 맡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 취지에 맞게 상임위 단위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올해 1월 제도 개편에 맞춰 북구의회는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 5조 2항에는 '정책지원관' 소관 사무를 ▲의회 의결 사항 관련 의정 활동 ▲의원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 ▲규정 질의서 작성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작성 및 첨삭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신분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까지 마련했으나, 규정 해석이 달라 업무·기능 등을 놓고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기초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는 올해 우선 정책지원관 전체 정원 중 절반인 5명을 채용하며, 이미 2명은 규정 일반직 공무원 전입을 받아 충원했다.

광주 지역 다른 기초의회도 정책지원관 채용·직제 개편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모든 채용이 끝나는 내년이면 각 의회 별 정책지원관 수는 동구의회 3명, 서구의회 6명, 남구의회 5명, 북구의회 10명, 광산구의회 9명 등 총 33명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상임위 교통정리...농해수위 '쏠림' 심화

제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사실상 원내 교통정리가 마무리됐다.

광주는 7~8개 상임위로 골고루 배치된 반면 전남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13개 전임, 3개 겸임, 2개 특위 등 총 18개 상임위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7~8

명(나주·화순,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주철현(여수갑)·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배정됐다.

전반기 농해수위 소속이었던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행정안전위로, 목포대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원익(목포)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배정됐다.

김희재(여수), 서동영(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도 전반기와 같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교육위에 배정돼 2년동안 더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취약계층과 나눔' 초복 삼계탕 포장
결기상 초복을 앞둔 13일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봉사 참가자들이 취약계층 세대에 나눌 삼계탕 등을 포장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 산자·국방·문체·정무·행안·과기정통위 등 골고루 전남, 농해수위 5명...전반기 이어 또 특정 상임위 몰려

개, 전남에서는 5개 상임위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윤영덕(동남갑) 의원이 정무위,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국방위,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 조오섭(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위, 이형석(북구을) 의원이 행정안전위, 이용빈(광산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치됐다.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양항자(서구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환경노동위 배치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도심 공군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위는 당초 지원자가 전무했으나 민주당 의원간 조율을 거쳐 시당위원장인 송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

이달초 상임위 신청 당시 광주는 산자위, 전남은 농해수위에 각각 3명, 5명이 신청해 상임위 편중 현상이 우려됐으나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정리가 이뤄진 반면 전남은 농해수위 쏠림이 현실화했다. 또 핵심 현안에 속하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된 환경노동위는 애당초 지원자도, 추후 배정자도 없어 정무적 해법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과 깊이 연관된 산자위와 과기정통위 역시 전무해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난항이 우려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일부 상임위 쏠림 현상이 여전히 안타깝다"며 "먼 안목에서 상임위 배정에 대한 대응적 안배와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복날 성수기 대비...전남도 '가금류 도축장 운영' 연장

전남도가 올 여름 닭·오리고기 최대 성수기인 복날을 앞두고 가금류 도축장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한해 전남에서 도축된 가금류는 8992만 8000여마리다. 전체 도축량의 30%를 차지하는 2735만 7000여마리는 성수기인 6~8월에 도축·유통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 복날 축산물

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위해 평일 가금류 도축장 운영을 연장하고 토요일과 휴일에도 개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닭·오리의 폐사와 유통 중 식육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오전 6시에 개장해 작업하던 것을 1시간 이상 일찍 개장하고, 작업 종료시간도 연장한다.

또 토요일과 주중 휴일에도 개장해 성수

기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도내 8개 가금류 도축장(닭 3곳·오리 5곳)에서 생산한 식육을 대상으로 식중독 유발 세균 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도 강화한다.

이용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육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능력·재능을 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 구분 | 보험료부담액 | 급여비 | 비율 |
|-----|----------|--------|------|
| 5분위 | 240,833원 | 1,141원 | 1.7배 |
| 4분위 | 125,531원 | 1,711원 | 2.1배 |
| 3분위 | 79,147원 | 2,111원 | 2.7배 |
| 2분위 | 48,103원 | 2,697원 | 5.3배 |
| 1분위 | 26,697원 | - | -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